

정책 >

## 정부, 올해 전기차 급속 충전기 3000기 확충... 공공부문 2280기

박성우 기자

입력 2021.02.01 18:45 | 수정 2021.02.01 18:48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목표로 올해 중 급속충전기 3000기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전차가 보급 확대에 맞춰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도 매우 중요한 당면과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 반도체) 추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미래차 30만대 시대를 달성하고 전기 충전기 3만기(급속충전기 3000기 포함)와 수소충전기 100기 이상을 신설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사의 저공해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보급목표를 지난해 15%에서 18%로 상향했다. 전기·수소차는 10%로 지정했다. 또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신규 차량 8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구매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기업 대상으로는 오는 2030년까지 보유차량 100%를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도록 하는 'K-EV100' 프로젝트를 유도한다.

열악한 충전환경도 개선한다. 환경부는 미래차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유형별로 충전기를 전략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전기차의 경우 최적입지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3만 충전기를 전략적으로 배치한다. 기존 충전기보다 3배 이상 빠른 초급속충전기도 확충한다. 수소충전소의 경우 올해까지 180기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 배치계획을 세우고 인·허가 특례와 사업자 연료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를 주저하는 이유로 충전소 부족, 장시간 충전 등을 지적하는 만큼 충전소 확충과 함께 충전시간 단축이 시급하다"며 "설치 비용이 높아 민간의 자발적 설치가 제한적인 급속충전기는 공공부문이 선도해 2280기를 직접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사업자 지원을 통해 접근성·수익성 높은 곳에 289기를, 운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존 주유소에도 충전기 구축비 지원을 통해 300기를 설치하겠다"며 "충전시간을 대폭 단축한 초급속충전기도 공공부문에서 최초로 43기 설치하고, 자동차 기업이 자체적으로 80기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전력·부지확보·건축 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